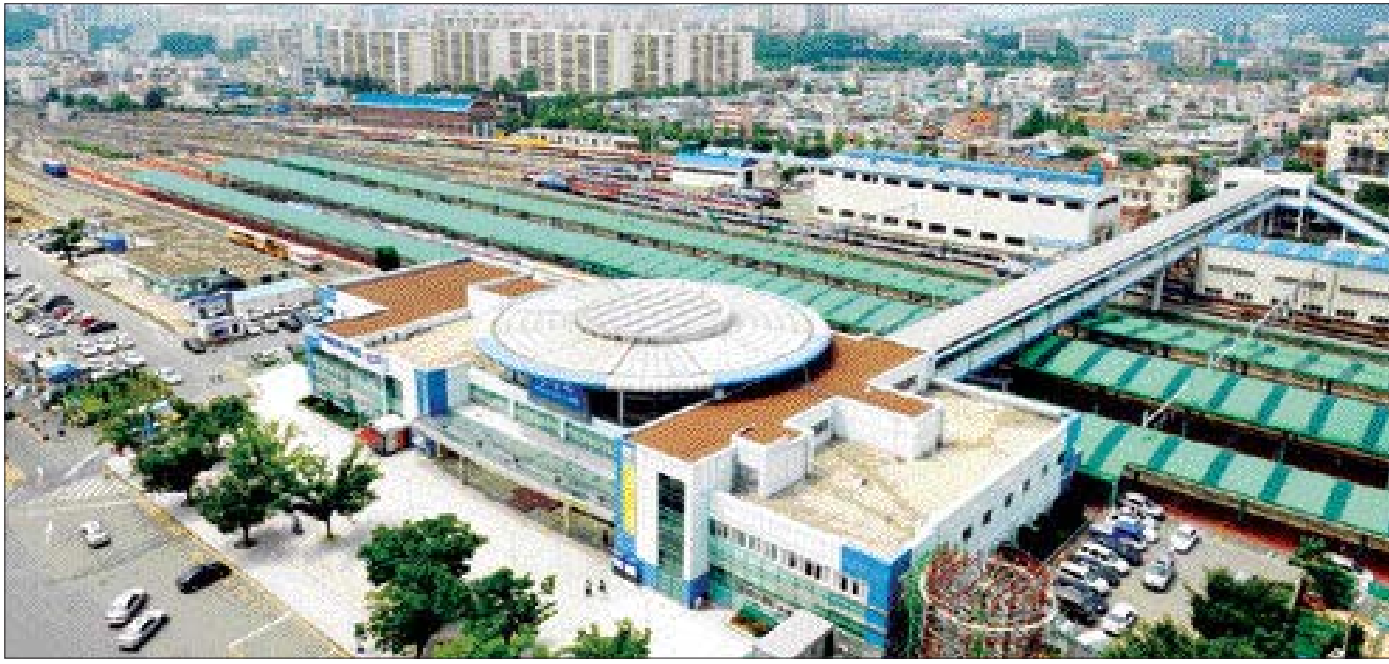


KTX 정차역 제외...광주역의 운명은



2014년 말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에서 광주역이 고속철도(KTX)정차역에서 제외돼 일반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해 광주역 이용객 중 4분의 3이 고속철도 승객으로,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광주역 주변은 공동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취임 하자마자 '민원 챙기기' 바쁘다 바빠

강운태 시장 '시민과의 대화' 5건 해결책 제시...한달새 150여명 민원 제기

강운태 광주시장이 당선자시절 약속했던 '시민과의 대화'를 시장 취임 후에도 이어가며 민원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시장 취임 후 첫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민원인에게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광주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대화 자리에는 ▲서구 농성동 교통광장(농성광장) 지정 해제 ▲전통시장 활성화 ▲수완지구 초등학교 과밀 문제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 등 5건의 민원을 제기한 12명의 민원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농성광장'과 관련 "공원부지가 넓은 편이어서 올해 말까지 광장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방침을 정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매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인 호남시장 활성화' 민원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으며, 초등학교 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한 수완지구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구역에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 지를 알아 보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중앙부처 방문, 해외출장 등 긴급 사안을 제외하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 광주시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신청란에 접수한 민원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면담 결과는 민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는 주요 시책으로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7일 당선자 시절부터 4일까지 시장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시민 수도 1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4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2010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우리나라-브라질전'에 함께 시구하기 위해 참석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광주의 주력산업인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폴리텍 5대학 광주캠퍼스에 금형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반역 전략...존폐 기로에

광주역 이전 및 송정역으로의 통합 문제는 광주시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고속철도(KTX)의 도입을 앞둔 지난 1990년대 후반 지역 내에서 광주역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동구·북구는 '반대', 서구·광산구는 '찬성'하는 등 자치구별로 극명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광주역·광주송정역 모두를 유지하는 이원화 방침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4년 말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고속철도역이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광주역은 고속철도가 없는 일반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논의로 지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고, 광주역~광주송정역간 셔틀전동차 설치를 추진하면서 KTX가 없는 역에 'KTX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어이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역 향후 어떻게 되나=광주시와 국토해양부는 광주역이 KTX 정차역 제외가 결정된 올 초 2억3900만원을 들여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주변을 대상으로 'KTX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KTX 역세권 개발은 철도 승객의 이동에 따른 수요를 예상해 그 주변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광주역 주변 38만900㎡, 광주송정역 주변 31만9800㎡에 이른다. 문제는 2014년부터는 광주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동 수요도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은 교육지적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 전동차를 설치해 광주송정역의 승·하차 이용객을 광주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역으로 그 기능이 떨어진 광주역 주변을 KTX 역세권으로 개발할 경우 수요와 상관없는 과도한 시설 공급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효율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광주역을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광주시가 미래수요를 감안, 중요교통시설 배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X 없는 광주역의 존치,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통합, 광주역 KTX 정차 재지정 등을 감안한 다양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주역은 2014년 말부터 KTX(하루 18편)이 없어지고 무궁화(17편)·새마을(6편)·화물열차(9편)만이 다니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승객 감소·도시 불균형...도심 쇠퇴 불가피 고속철 정차 효율성 과학적 판단 나와야"

◇'광주역 제외' 어떻게 됐나=지난 2006년 8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기본설계를 앞두고 2007년 6월 광산구 사전사업설명회, 같은 해 7월 광주시 토론회 등 단 2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역을 정차역에서 제외한 기본설계 계획노선이 결정됐다. 그 뒤 2009년 초부터 1단계(총북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공사기간을 2015년에서 1년 앞당기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졌으나 이 때도 광주역 문제는 거론되지 못했다.

늦게나마 일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지역 학계다. 정봉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광주역 고속철도역의 운영 및 역세권 개발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광주

송정역의 일원체제는 중장기적으로 철도승객 감소, 도시의 불균형 발전, 시민 접근성 저하, 교통혼잡의 악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광주권 고속철도역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으로 이원화해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광주역이 KTX 정차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광주시는 이 같은 결정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지역 내 중요한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논의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대안을 갖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 당권 주자들 "호남 표심 잡아야"

7·14 전당대회 후보 등록 '당권 잡기' 열전 10일 돌입

홍준표·정두언·김대식·남경필 등 줄줄이 광주 방문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7·14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후보들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광주 방문이 줄을 이었다. 당 대표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4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득표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3일에는 정두언 의원이, 2일에는 남경필 의원이 각각 광주를 찾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안상수 전 원내 대표가 광주를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전북 대의원이 통틀어 6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15~20%의 표를 모아준 변화된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당 대표 후보 등록 후 곧바로 광주로 내려와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낮 12시 광주 동구 금수장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희망의 싹'을 났고, 전국 정당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호남부터 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첫 선거운동 지역을 광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적임자"라며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방지와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당·청 관계 일체화를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독점적 정당구조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아당과 협의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 대표가 되면 계파를 해체하고 그 사람들(친이·친박계)에게 이를 요청하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로 출마해 13.4%를 얻은 김대식 전 사무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한나라당의 전국 정당화와 지역주의 극복,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당을 혁신할 것"이라며 "이제 호남에서도 지방선거 최고위원이 아닌 선출직 최고위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지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호남 당원들이 전당대회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팍팍 묻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서

호남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당과 대통령을 섬ટે 호남발전의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일과 3일에는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광주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당원·위원장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안상수 전 원내 대표가 광주를 찾아 당원들을 초청,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선거 후 지역 민심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앞서 표발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4일 후보등록에 이어 5일부터 열흘간 대의원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3차례에 걸친 TV토론 등을 벌인 뒤 14일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여성 1명)을 선출한다.

비전발표회는 6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강원권(8일), 부산·울산·경남권(9일), 광주·호남·제주권(10일), 대전·충청권(11일) 등 5개 권역별로 '릴레이 유세' 방식으로 이어진다.

전당대회 출마자는 친이(친이명박)계의 경우 안상수·홍준표·정두언·정미경 의원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서병수·이성현·주성영·한선교·이해훈 의원, 중립계 남경필·나경원·김성식·조진혁 의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마카오(홍콩) 전세기 취항 총6회

무엇보다도 (2010년 7월) -> 마카오 (10월 15일 출발)
홍콩 (10월 15일 출발) -> 마카오 (10월 15일 출발)
홍콩 (10월 15일 출발) -> 마카오 (10월 15일 출발)
홍콩 (10월 15일 출발) -> 마카오 (10월 15일 출발)

| | | | | | |
|-----|--------------------|----------|-----|---------------------|----------|
| 패키지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849,000- | 에어텔 | 마카오(10월 15일)출발 4.5일 | 649,000- |
|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849,000- |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699,000- |
|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899,000- |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749,000- |
| | 홍콩(10월 15일)출발 4.5일 | 999,000- | | | |